

투데이

안과 이어 외과·이비인후과도 수술 거부

의협, 포괄수가제 반발... 환자불편 우려

복지부 “타협 없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기로 한 것에 반발해 의사가 집단 수술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과의사회가 지난 10일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타협 없이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술 등 진료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면허정지 등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 등 지역 의사회와 진료 과목별 개원의 의사회들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앙 단위 의사의 최종 결정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다만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의사들의 수술 거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데다 정부의 강경 대처 방침으로, 실제 수술 거부로 이어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12년 만에 의료대란 파문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노환구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은 12

일 긴급 회동을 갖고 1주일간의 한시적인 수술 거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포괄수가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 수술은 시일을 미룰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인 만큼 거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 등 진료내용에 상관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정액진료비는 불성실한 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실제로 집단 수술 거부에 들어갈 경우 상당수 환자들이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어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

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범죄행위”라며 “국민생명을 불모로 한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대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포괄수가제=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일임비 정착제도. 대상 질환은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지난 1997년 시범 도입된 이후 현재 3282개 진료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에도 의무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39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13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정부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수상자와 보호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국 위한 희생·봉사... 사회 밝히는 등불

제39회 광주일보 보훈대상 시상식... 5명 수상 영예

제39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안중현 광주지방보훈청장, 이병록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해 시민·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후 4시30분 광주시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기 위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좌근(전상군경 6급·70·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씨, 장정미(공상군경 유족 처·43·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씨, 서기순(전상군경 유족 처·73·광주시 북구 두암동)씨, 송태중(순직군경 유족 부·77·광주시 서구 치평동)씨, 김두

영(무공수훈 화랑·83·광주시 북구 운암1동)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했으며, 올해로 39번째를 맞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기업사장 인사 공청회 재의 요구 반발

전국시도의회의장協 “행안부 방침은 자치정신 훼손” 성명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를 행정안전부가 재의(再議)를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가 이를 공동대처하기로 해 파장이 확산된 전망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정협의회’는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에 대한 행안부의 재의 요구에 대한 반발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는 이날 윤봉근 광주시시장의 발의로 채택된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안전부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명시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의회는 “행안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법조계와 학계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발상 전환과 함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전국 의회가 공동 대처키로 한 만큼 향후 인사검증 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회차원의

의 법적개정이 추진되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에 위반된다고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동철 의원,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산 갑)은 13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회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제는 지방공기업 사장도 능력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면서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등산 정상

7월1일 개방

무등산 정상이 7월1일 다시 개방된다. 지난 4월28일 개방되어 이어 올들어 두번째다.

광주시는 그동안 정상 개방이 토요일에 이뤄졌으나 토요일 근무 직장인 등을 위해 이번에는 일요일에 개방키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중고생 40명도 초청해 무등산 탐방의 기쁨과 함께 자활의 희망을 북돋울 계획이다.

무등산 정상 천왕봉(1,187m)은 지난 1966년 군부대 주둔 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고, 지난해 5월 45년만에 처음 개방됐다.

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당일 2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할 계획이다. 문의: 광주시 공원녹지과(062-613-4210).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 미흡

279건 적발... 장애인 생활시설 심각

광주지역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보호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등 217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및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내와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는 없었지만, 인권침해 우려 사항 등 총 279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83명의 민관합동 조사반이 실시했으며, 시는 7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경고)을, 6건은 개선권고, 197건은 현지 시정조치했다.

특히 81개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개선명령 62건, 현지 시정 129건 등 총 19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화장실이나 샤워장 등이 사생활 노

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5개 노인복지시설은 개선명령 1건, 개선권고 3건, 현지시정 62건 등 66건이 적발됐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본재산 변경시 정관변경 지연, 운영위원회 개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17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운영위원회 공개원칙 미준수나 법인 전입금 이월 등 총 25건이 적발됐다.

부랑인·노숙인 쉼터의 경우 알코올 의존증 입소자들로 인한 피해가 나타났다.

반면 개인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과 회복비 개인 의사 존중,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등은 수범사례로 꼽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풍기·청소기·밥솥 등

소형가전제품 무상배출

이달 말부터 선풍기, 청소기, 밥솥 등 소형 가전제품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가전제품 제조사 10곳과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 소형을 중심으로 16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대상품목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가습기, 믹서기, 밥솥, 비디오, 선풍기, 식기건조기(세척기 포함), 전기히터, 다리미, 전자레인지다.

소비자들은 빠른달 이달말부터 이들 소형 폐가전제품을 브랜드와 상관없이 가까운 전자제품 판매대리점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에 가져가면 무상으로 내놓을 수 있다. /연합뉴스

카드대금 “즉시결제”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할인의료점, 유흥업소, 각종체인점, 식당, 중고차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맹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68-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함평다이너스티CC

신입 및 경력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산다, 친환경 나비의 고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주부사원(만35세이하)
- 급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경력자 면접 후 결정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기숙사 제공, 1일 3식 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정리 산1-6
 - 담당 : 식음료팀 이상욱 팀장
 - 전화 : 061-320-7799
 - 이메일 : guy0818@hanmail.net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가족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적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적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함창

근대한불교계종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문의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